

## 농업의 세계화, 무엇이 문제인가?

허 현 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 1. 농업의 세계화,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화(globalization)’가, 특히 지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가 살 길인 양 우리 사회에서 유행어가 된 지 오래이다. 요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여전한 것 같다. 마치 구한말 개화 논쟁이 꼭 100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개화가 자주적 개화냐, 식민화로의 굴복적, 패국적 개화냐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세계화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계화냐가 중요한 물음일 것이다. 이와 같은 물음은 오늘 이 땅의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 그리고 이에 기반하고 이와 함께 살아갈 국민경제, 도시, 소비자의 현실에서 엄중히 물어져야 할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세계화는 사실 지난 5,60년대 미 잉여농산물 도입, 6,70년대 통일벼 등 다수확 단작화와 석유에너지 의존의 비료 농약 다투입 농법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7,80년대 개방농정에서 가시화되고 지난 UR협정으로 기본 틀을 갖추면서 최근 WTO 재협상으로 마지막 완결 편에 들어간 형국이다.

이처럼 지난 50년 간 우리 농업에서 세계화가 추구되어온 결

과가, 얼마나 농업 자립, 농촌 부흥, 농민의 인간다운 삶 실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농간 균형 발전 및 상호 보완, 소비자의 생명 보호와 생태적 삶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가는 오늘 전 국민이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즉, 농업의 세계화가 농민에게, 소비자에게, 농촌에, 도시에, 국토환경과 국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가 밝혀지고, 그래서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 세계화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조직하여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고 농민 생존의 보장과 소비자 생명의 보호, 농업 자립도 증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실현에 적극 나서려는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우리 농업의 세계화가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밝혀보기 위해, 지난 수십 년 간 통사적으로 정리하기 보다, 세계화가 외세와 국내 정부에 의해 국민적 화두로 조작되어 강행된 UR 이후 지금까지 우리 농업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답해볼까 한다.

## 2. WTO=농업의 세계화는 빈곤의 세계화

WTO체제로 나타난 농업의 세계화는 한마디로 '자유무역'을 빙자한 수출 강국과 수입 약소국 간의 불공정·수탈 무역이며, 그래서 수입국·개도국의 농업(식량)주권이 박탈되어온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의 근본 배경에는 7,80년대 냉전구조가 이완·해체되고 비록 미국 주도하이지만 미·EU·일·중·러·제3세계간의 다극체제가 전개되면서 미국이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농업·금융·서비스·지식정보산업)중심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재편, 이른바 '뉴팍스 아메리카' 체제를 구축하려는 기도가 깔려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그 핵심에 미국을 업고 전 세계 식량·종자·농약·비료 산업을 좌지우지해온 초국적 자본으로써 곡

물, 종자, 농화학, 식품 다국적기업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농업의 세계화, 곧 자유무역은 미국 및 이들 초국적 자본/다국적 기업들이 상대국들을 무장 해제시킨 채 마음껏 이득을 취하는 '그들만의 자유무역'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의 농업지원정책을 해체시키고, 위생 및 검역제도를 약화시키고,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제한시키고, 종자주권을 박탈하고, 그래서 강대국 및 초국적 자본/다국적기업 중심의 세계농업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의 세계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및 초국적 자본/다국적기업들과 끄나풀 관계에 있는 국내 독점재벌의 국내 독점 강화와 직결되어 왔다. WTO 체제가 강대국,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강화,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될수록, 국내적으로 독점 강화 및 민중 희생의 심화가 초래된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의 모순을 세계화를 통해 강제 전가, 해소하여 국민국가 강화를 시도하는 반면, 한국 등은 세계화로 인한 모순을 국민국가 내에서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자본과 노동, 자본과 농민 간 갈등 및 민중 희생의 심화가 초래되고 있다. 농업의 세계화로 인한 국내외 독점의 가속화는 농업 해체를 통한 농민의 몰락을 야기하고, 환경파괴와 농약법적인 수입농산물 홍수로 결국 노동자·소비자 부담이 증대되는 등, 빈곤의 세계화가 초래되는 것이다.

### 3. WTO 체제=농업의 세계화의 결과

그러면, 지난 UR/WTO체제 이후 오늘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나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나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농산물 무역 구조 왜곡 심화

선진국의 경우 UR협정 이행 1년 만에 농산물 무역수지가 흑

자로 반전되었고 유럽국가들도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식량수입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UR 이후 무역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북미, 호주, 유럽 등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입이 늘어난 결과). 특히, 국제 곡물시장의 독과점적 구조가 심화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3개 수출국들이 전세계 수출량 가운데 옥수수의 경우 91%, 콩 90%, 쌀 57%, 밀과 밀가루 56%를 독점하게 되었다.

〈표1〉 세계 주요 곡물의 국별 수출점유율(상위 3개국, 1996년도)

구 분	국별 점유율(물량 기준)	합 계
옥수수	미국 73%, 프랑스 9%, 아르헨티나 9%	91%
콩	미국 74%, 브라질 10%, 아르헨티나 6%	90%
쌀	태국 28%, 베트남 18%, 미국 11%	57%
밀, 밀가루	미국 28%, 캐나다 15%, 프랑스 13%	56%

미국이 옥수수 73%, 콩 74%, 밀과 밀가루 28%, 쌀 11%의 물량을 국제시장에 공급, 그야말로 냉전시대의 핵우산을 식량우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다.

21세기는 식량전쟁의 시대라 한다. 앞으로는 외화가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구증가(99.10 현재, 세계인구 60억 돌파) 속에 매년 기아 인구가 8억 6천만 명인데 반해, 위에서 보듯 세계곡물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구환경 위기, 사막화 및 기상재해 심화 등으로 곡물 작황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세계곡물 재고량이 감소하여 생산 자체의 한계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식량위기가,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적 차원의 포식과 기아의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UR/WTO체제 이후 특히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전 95-97년 3년 간 농축산물 무역수지적자(수입-수출)가 235억 달러로써, 이 3년 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적

자의 무려 65%를 차지했다. 지난 IMF사태가 초래된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외채와 무역수지적자의 급팽창에서 찾을 수 있다.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식량자급도가 겨우 31.7%(98년 기준)에 불과했고, 그래서 95-97년 3년간 235억 달러의 농축산물 무역수지적자로 외채를 꾸어 식량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거나 세계화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농업의 세계화=WTO체제라는 농업해체·수입농산물 급증 정책을 편 탓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한마디로 농민 파탄은 물론,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도시 생활자들을 나락으로 빠뜨린 IMF신탁통치였던 것이다.

## (2) 한국 농업의 해체 위기

그러면, UR농업협정=WTO체제 출범 이후 국내 농업 영향은 어떠한가. 농업생산 쇠퇴, 생산주체 해체, 자작농적 토지소유 해체, 농가경제 전반 악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농업생산 쇠퇴

WTO 이후 95-98년 간 농업생산액은 하락하고, 경지면적, 경지이용률, 양곡자급도 등이 정체되어 있다.

〈표2〉 농업생산 및 양곡자급률 추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농업생산액(억원)	200,373	209,923	206,189	190,588	
%	재 배 업	83.2	83.7	86.6	89.6
	축 산 업	15.2	14.6	11.5	8.3
	부대서비스	1.6	1.7	1.9	2.1
경지면적(백만ha)	198.5	194.5	192.4	191.0	
경지이용률(%)	108.1	107.9	107.8	110.1	
양곡자급도(%)	29.1	26.4	30.4	31.7	

〈표2〉에서 보듯이 농업생산 중 특히 축산업 비중이 95년 이

후 98년 현재 절반으로 축소됐고, 경지 이용율은 110%대의 한 번 같이로 단순이용의 담보상태에 있으며, 양곡자급도 역시 최근 쌀 농사 덕분에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98년에 식량자급도가 31.7%였지만, 그중 쌀이 그나마 104.5%, 보리쌀이 54.7%, 콩 9.5%, 옥수수 1.2%, 밀 0.1%에 불과하다. 사료용 곡물을 빼고 식용만 따지면 전체 자급도가 58.5% (그래도 콩 34.3%, 옥수수 4.6%, 밀 0.25% 자급 수준)가 된다지만, 쇠고기 1kg 생산에 6-7kg, 돼지고기 1kg 생산에 3-4kg의 곡물이 들어가 사실상 고기가 고농축 곡물임을 생각하면 자급 수준은 피장파장이다.

### 2) 농업생산 주체 해체

농가인구는 99년 현재 421만명, 이 가운데 50세 이상 농가인구는 49.1%, 취업자 중 50세 이상은 68.8%에 달하는 등, 이 농과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및 영농계승 주체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표3〉 농업노동력 추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농가인구(천명)	4,851	4,692	4,468	4,400	4,210
50세 이상(%)	43.7	46.3	47.4	47.4	49.1
농림업취업자(천명)	2,424	2,298	2,215	2,086	2,024
50세 이상(%)	64.0	65.7	68.2	67.6	68.8

### 3) 자작농적 토지소유 해체

현재 경지규모 확대는 대개 농지임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농지의 실제 지가가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수익지가보다 크기 때문에 농지경영 수익으로는 농지구입자금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99년 2월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98년 현재 소작농가는 140

만 농가 중 68.4%인 95만9천 호에 달하며, 소작농지는 191만 ha 중 41.3%인 78만9천ha(90년에는 37.3%), 소작농지 중 비농가 소유지는 70.4%인 55만5천ha에 달한다.

최근 소작농, 소작지가 급증하는 것은 전향적 차원에서 규모 확대를 위해 임차하는 일부 예외 경우를 제하면, 농가생산 수익성 악화→농가부채 급증→농가경제 파산→농지 처분 또는 담보농지 상실→재소작농화 등의 원인이 크다.

#### 4) 농가경제 전반 악화

WTO체제의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은, 농산물시장 전면개방과 저농산물가격정책 및 농업·농민소외정책을 추진한 탓에, 앞서 살펴본 수치에서도 증명이 되지만, 특히 농가경제의 주요 지표 추이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표4〉 농가경제 주요 지표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농가소득(천원)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농업소득(천원)	10,469	10,837	10,204	8,955	10,566
가 계 비(천원)	14,782	17,039	17,045	16,442	17,123
부 채(천원)	9,163	11,734	13,012	17,011	18,535
가계비충족도%	70.8	63.6	59.9	54.5	61.7
농업소득률 %	65.4	62.7	59.0	53.8	56.7
부채비율(1) %	5.8	6.9	7.1	8.8	12.0
부채비율(2) %	145.5	228.2	227.1	485.2	374.2

- 가계비충족도 = 농업소득/가계비 × 100
-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조수익 × 100
- 부채비율(1) = 차입금/농가자산 × 100
- 부채비율(2) = 차입금/농가경제임여 × 100

〈표4〉에서 보듯이 99년 농가소득은 전년도보다 다소 나아졌다지만, IMF 사태로 전년도인 98년의 농가경제가 예년 평균보

다 워낙 나뉘었던 점을 고려하면, UR이후 계속 농가소득이 하락 추세이다(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그만큼 실질농가소득은 더욱 하락). 특히 95년 이후 농업소득율, 가계비총족도가 모두 최악인 것은 그나마 낮은 수준의 농가소득도 농사에서가 아니라 농사의, 즉 농외소득(품값 등, 99년 7,034천원)+이전수입(도시에서의 부조, 99년 4,723천원)으로 절반 이상이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채비율의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농사지어 가계비 등을 뺀 순 농가경제잉여 대비 농가부채가 99년 374.2%로서 전년대비 다소 나아졌지만 IMF 특수상황을 감안, 95년 이후 전체 추이를 보면 매년 악화되고 있다. 이는 <표5>에서 보면 95년 이후 농가부채가 2배 이상 늘어났고 특히 부채를 갚기 위한 부채 또한 2배 가까이 늘어난 데서 그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반면, 농가부채는 급절로 늘어나는 데서 오늘 농가경제 전반의 악화현상의 심각함이 잘 드러난다.

<표5> 농가부채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차입처별 부채규모				부채상환용
	총액	농협	시중은행 등	사 채	
1995	9,163	7,364	1,000	799	( 722)
1996	11,734	8,500	2,492	742	(1,140)
1997	13,012	9,561	2,743	708	(1,456)
1998	17,011	13,263	2,972	777	(1,400)
1999	18,535	14,445	3,080	1,009	(1,299)

<표6>의 도·농간 소득 비교를 보면, 농가소득이 그나마 낮은 도시 근로자가구보다 80% 수준으로써, UR이후 매년 악화일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 도·농간 소득 비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농가소득(천원)	21,803	23,298	23,488	20,494
도시근로자가구소득	22,933	25,832	27,448	25,597
농가/근로자가구	95.1%	90.2%	85.6%	80.1%

### (3) 오늘 한국 농업의 구조와 특징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농업의 세계화=WTO체제로 인한 우리 농업의 해체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구조, 농업구조, 생산구조 속에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자. 크게 생산력적 측면과 생산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생산력적 측면에서는 첫째, 정책구조면에서 중앙집권적, 중앙설계주의적, 획일적, 지역 무특성적 농정체계를 들 수 있다. 농업의 세계화를 강행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적, 다원적, 내발적 정책추진을 가로막고, 중앙에서 그린 정책을 획일적으로 관철해온 것이다.

둘째, 선별적 상층 전업농 중심의 개별농가 육성정책이다. 우리 농민들 대다수가 영세소농인 한, 외부의 강력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동적 대응·공생적 농업구조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농업주체 정책이다. 이를 외면, 농민 상호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자본 위주 규모확대 일변도의 소수 전업농 육성정책에 치중하여, 영세소농의 도태→농업 전반의 자연 축소→농산물 수입 확대의 악순환을 기도한 것이다. 더욱이 그들 소수 전업농 조차 자본 위주·에너지 다투입 위주의 시설농업·규모확대농업에 치달아 막대한 채무농민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 대다수 전업농의 현실이다.

셋째, 에너지 다소비형, 농자재 다투입형, 시설이용형 농업의 급속한 증가와 급속한 몰락이다. 수입개방국면하의 농업 전반적 하락 속에서는 이러한 농업은 고비용 저효율 및 만성적 가격불안정 속의 투기적 생산과 몰락이 불가피하다.

넷째, 석유문명 의존의 화학 농법, 단작화, 연작 전문화로 인한 환경 파괴형 수탈농업, 농민 노동력 고갈형 농업, 소비자 생명과피 및 소비자 욕구 외면형 농업이다. 땅을 살리고 농민 자신을 살리고 소비자를 살리고 그래서 농업, 인간, 자연이 상생 순환하지 못하게 하고, 화학농법의 단작화·전문화를 낳아 더욱더 비료·농약·종자·석유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농업 세계화의 지배세력(초국적 자본/다국적기업과 이들과 국내 크나플 관계에 있는 수입식품재벌 및 농자재 대기업)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관계적 측면에서 오늘 우리 농업의 세계화를 추진해왔고 또한 그 결과물인 생산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에이전트 관계 형성이다. 다국적 기업은 종자, 농산원료, 식품, 농화학 자재, 동물 의약품, 유전자조작 식료품 등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곡물 다국적기업으로는 카길 콘티넨탈, ADM, 앙드레, 병기, 미쓰이, 미쓰비시 등이 있고, 청과물 다국적기업으로는 델몬트, 썬키스트, 종자 다국적기업으로는 카길, 몬산토, 노바티스, 데칼브, 파이오니아가 있다. 이들 중, 카길 콘티넨탈(우리나라 옥수수, 콩의 60-80% 공급 독점), 몬산토, 노바티스, 델몬트 등은 대표적인 한국 진출 다국적기업이며, 그 외 자본들도 우리 대기업들을 에이전트로 거느리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들 다국적 기업들과 크나플 관계를 형성하여 음식료품 가공산업을 장악, 주요 원료를 수입 조달하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그야말로 '세계화=미국화=분식화=육식화=인스턴트화' 하는 등, 우리들의 음식 소비문화 자체를 장악하는 침범 노릇을 해온 것이다.

둘째, 위 문제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자 당초 그 목표이기도 했던 우리나라 식료품 시스템(Food System) 내 국내농업의 지위 저하이다.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과정(Food Chain)을 볼 때, 식료품은 곡류 상태-신선식품 상태-가

공식품 상태-외식 소비 등의 전체 식료품 시스템을 형성, 발전한다. 우리나라 식료품의 흐름별 산업인구도 변화(1996년도 기준)에서 그 시스템 전체의 규모와 비중을 잘 알 수 있다. 즉, 농가 150만 및 어가 10만 가구+식료품 제조업체 6,000개소+식료품 도매업체 3만개+식료품 소매업체 28만개+외식업소 52만개+소비자가구 1,300만 가구 등이 우리나라 전체 식료품 시스템을 형성하는 주체이다. <표7>, <표8>에서 보듯이 갈수록 국내 곡류/신선식품의 가정내 소비율이 줄고 수입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 발달로 국내농업 비중이 저하되고 있다. 외식산업의 경우 UR이후 현재, 맥도날드, KFC, 피자헛, 버거킹, 도미노 피자, 피자 인 등 세계 유수의 외식업체가 국내에 30여개 진출, 청소년의 음식소비문화의 미국화=세계화=국내 농업 비중 저하=농업해체를 심화시키고 있다.

<표7> 도시가구당 월 음식비 지출 구성 추이

구 분	음식물비	곡류+신선식품	가공식품	외 식
1995	367,080원	43.6%	24.6%	31.8%
1996	409,502원	42.5%	23.8%	33.6%
1997	427,458원	39.3%	24.4%	36.3%

<표8> 전체 식료품 시장에서 우리 농민의 지위

구 분	식료품 시장	농민 수취액	
1995	57조 800억원	20조 5,722억원	36.0%
1996	63조 6,770억원	21조 5,306억원	33.8%
1997	66조 4,690억원	21조 2,052억원	31.9%
1998	56조 8,900억원	19조 6,049억원	34.5%

한마디로 WTO 체제=농업의 세계화는→식량자급력 하락→농산물 수입증대→식품안전성 보장 곤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저하 및 파괴, 농촌지역사회 붕괴→도시 소비자 피해를 결과했다.

이를 경제정책 면에서 보면 대외종속형, 수출주도형, 불균형 공업화→저농산물가격=농산물시장개방정책→농·공간 관계 단절 및 도·농간, 농·공간, 농민, 도시가구간 격차 심화→영세농경제 해체, 선별적 구조조정 정책→식량공급능력 파괴, 농민의 토지 분리 심화(가족 소농의 프롤레타리아화, 농업생산력 쇠퇴, 영농담당주체 공동화/空洞化)→농촌지역사회 붕괴 위기→대도시 집중, 도시문제 심각, 국민경제의 효율성 저해, 대도시 사회적 관리비용 급증→도시 소비자 피해를 곱과한 것이다.

즉, 농업의 세계화=WTO체제는 농업해체·농민생존 위기·농촌 파괴만이 아니라, 소비자·국민경제·도시 모두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 5. 진정한 국민의 정부의 할 일

지금까지 농업의 세계화=WTO체제가 우리 농업에, 나아가 국민경제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간단히나마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라면, 최소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만 '자주적 개화'이며, 세계화로 생존과 생명의 위기에 내몰리는 우리 농민·소비자를 위한 정부일 수 있는 것인가. 당면한 WTO재협상과 관련한 과제와 오늘 해체 위기에 있는 우리 농업의 근본 회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WTO 농업재협상에 대한 대응 과제

#### 1) 쌀 관세화 유예조치 유지 및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국내시장 격리

- 쌀 시장접근 내용 : 1995년 5만1천톤(소비량의 1%)→2004년 20만5천톤(소비량의 4%). 이를 모두 국내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강구해야 함.
- 주식 쌀의 국제 재고 불안, 국제 식량안보 위험, 남북 통일농업 대비, 대북 식량난 완화 기여로 동북아 평화

정착, 쌀 자급력 제고 및 재고 확대를 위해 관세화 유예  
필연 및 국내 쌀생산확대 정책 시급.

## 2) 개도국 지위 유지

- OECD 가입시 개도국 인정, FAO에서 계속 개도국 인정, IMF 구조조정 관리국 등을 감안.
- 우리 농업 및 국민경제가 UR농업협정 이행 및 경제위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파산일보 직전 상황 - 개도국 지위 지속의 당위성 확보.

## 3) 비교역적 관심 사항(NTC) 구체적 명시

- 포괄적 식량안보 조항 선택 및 주식에의 식량주권 확보, 무역자유화 일반 원칙에서 제외시킴.
- 주곡생산기반의 유지 필요성, 높은 식량수입의존도의 완화 중요성,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제시.

## 4) 국내 보조정책의 구체적 집행 시급

- 다양한 직접지불제 전면 조기 도입이 중요.
- 생산제한하 직접지불제, 최소허용보조, 허용보조, 직접지불제 및 정부 서비스의 구체적 정책대상 개발 및 조기 시행.
- EU 'Agenda2000', 미국 '1996농업법', 일본 '신농업기본법'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지원정책을 적극 우리식으로 바꾸어 도입, 국내 농업지원정책 추진.

## 5) GM식품 표시 강화 및 무역 규제

- 2000. 1. 28 캐나다 몬트리올 '생명공학안전의정서' 타결 : GMO 유전자조작 생물체, 종자, 농산물, 식품의 무역규제 가능하게 되었음(수입국이 위해성 판단하면 수입금지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도입됨).
-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은 전세계 시민사회가 WTO라는 무

소불위의 자유무역 원칙에 대항, 시애틀 결렬운동 연장 선상에서 환경, 건강문제가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쳐질 수 없다는 상식을 관철한 것.

- 우리는 하루빨리 모든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그 가공 식료품에 대한 표시제 실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

## 6) 동식물 검역 행정의 일원화, 체계화, 수출국 전진 검역, 벌칙 강화

- 중국산 납꽃계 소동은 방산의 일각임. 수입곡물의 맹독 제초제, 살충제, 수확후 처리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검역 기준, 방법, 행정, 인력, 벌칙 전반의 대폭 강화 시급

## (2) 국내 농정 과제, '세계화=개방농정'의 근본 전환

### 1)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정립

- 농업보호를 위한 우리의 농정철학, 이념, 논리, 정책수단 개발이 시급함.
- 지역간, 부문간,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한 구조개선 정책 시행해야 함.
- 선진 각국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WTO 체제하 다양한 농업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함.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적극 농정 추진하는 틀을 갖추어야 함.
-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협동조직(자주적 농민조직, 협동조합, 기타 농촌 지역내 자립자치적 비영리조직 등) 간의 협력적, 역할분담적 농정추진체계의 새로운 추진 필요함.

### 2) WTO 체제에 대응하는 농정 추진과제

- 국민경제에 필요한 적정규모 농업 건설(소득 격차 해소, 생산력 격차 해소, 적정 식량자급률 제고 등).

- 영세농 탈농을 전제한 소수 상층 전업농 중심의 개별 경영 및 선택적 규모확대의 구조정책을 전환 : 농지, 노동력, 자본, 기타 자원 등 광범위한 중소농가가 포괄하고 있는 지역내 농업자원의 총체적, 계획적 최적 이용, '지역농업 조직화'로 지역사회 활성화, 식량자급력 향상, 농업생산성 제고.
- 농민의 농정 주체화 : 하양식, 획일식, 중앙설계형 농정 → 자율적, 지역밀착형, 지방자치적 민주농정 실현.
- 농업·농촌의 외부경제효과=다원적 기능=공공재 산출기능 증진 및 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농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댓가 지불 .
- 다양한 직접지불제 전면 도입, 특히 중산간 조건불리지역 진흥책 (직접지불제 등).
- 환경보전형·소비자친화형 농업생산 전면 육성.
- 품목별 농산물가격지지정책 추진.
- 유통구조 축소 등 유통개혁에 의한 농민 수취가격 보장, 소비자 구입가격 안정.
- 자립적 생산력 함양(농자재 해외의존 심화 및 에너지 과소비 농법 탈피).
- 농지보전 강화(진흥지역 확대와 인센티브제 실시).